

## 3·1운동, 선교사 그리고 미일간의 교섭과 타결

안종철\*

### 목 차

- I. 머리말
- II. 3·1운동의 발발과 미국 선교사들
- III. 미국 기독교 기관들의 대일본 접촉과 미일 타협
- IV. 맺음말

### I. 머리말

3·1운동에서 선교사들이 차지한 역할은 국내와 해외 학계에서 공히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자료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영어권에서 더 자세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던 것 같다. 물론 3·1운동의 계획과 진행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인들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해외에 알려지게 되면서 영국과 미국일각에서는 일본의 만행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식민행정의 ‘개혁’을 약속했다. 3·1운동을 국제적 사건으로 만드는데 선교사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sup>1)</sup>

---

\*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수료, 서울대 강사.

선교사, 미 국무부, 교과 해외선교부, 일본 당국 등의 대응은 이 시기 한미 관계의 한 정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를 간략하게 일별해 보자. 먼저 볼드윈(Baldwin)의 연구는 가장 체계 있는 것으로 논문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3·1운동 당시 선교사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를 다루고 있다.<sup>2)</sup> 식민지 조선의 정치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당국은 적어도 3·1운동과 관련된 일본의 잔인한 진압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만 있을 수 없었다. 선교사들의 3·1운동에 대한 태도는 한마디로 ‘잔인함에 대해서는 중립은 없다(No neutrality for Brutality)’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sup>3)</sup> 구대열은 영국측 선교사들의 입장을 다루었다.<sup>4)</sup> 구대열은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3·1운동시 영국 정부와 입장을 함께 하면서 일본의 진압방식에 대해 거의 비판하지 않았지만 호주, 캐나다 등 다른 영연방 국가 출신의 선교사들은 일본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교사 2세인 모펫(Moffett)의 연구는 가족의 경험과 함께 당시 평양지역 미 북 장로교 선교사들의 3·1운동에 대한 태도를 다루었다.<sup>5)</sup> 비슷한 시

- 
- 1) 당시 한반도 거주 선교사들은 거의 대개가 미국의 주류 4대 교파(미 북장로교, 남장로교, 미 북감리교, 남감리교) 출신들이다. 1884-1910년에 내한한 선교사의 총수는 대략 499명 정도인데 4대 교파 출신이 387명으로 압도적이다. 류대영, 『초기미국선교사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27쪽. 주류 교파 미국 선교사들의 압도적 비율은 선교사들이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인퇴(引退)하는 1940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
  - 2) Frank Baldwin, "Missionaries and the March First Movement: Can Moral Men be Neutral?," Andrew C. Nahm ed.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MI: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3. 특히 일본의 한국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한 선교사들의 분개에 대해서는 pp. 200-203 참조.
  - 3) J. V. Berger to State Department, 1919년 7월 29일, 895.00/646. 이 문서는 안동지역 선교사 Mrs. R. E. Winn (Berger 목사 형제의 부인)이 6월 29일에 안동지역 시위자들의 시신사진을 첨부해 보낸 것을 버거가 국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당시 한반도 주재 선교사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다고 했다.
  - 4) Dae-yeol Ku, *Korea Und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nglo-Japanese Relations*. The Royal Asiatic Society, 1985, Ch. 6. "Missionaries in the Uprisings."
  - 5) Samuel H. Moffett, "The Independent Movement and the Missionaries"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기 국내에서도 선교사들의 3·1운동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나왔다.<sup>6)</sup> 민경배의 연구는 3·1운동을 조사차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암스트롱(A. E. Armstrong)의 조사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 교회연합회 측이 암스트롱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7)</sup> 이 점은 미 본국의 기독교계와 현지 선교사들의 입장 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시 미 북 장로교 측의 입장을 다루면서도 미 총영사관측과 선교사, 총독부와 선교사들 간의 관계를 평가한 클라크(Clark)의 연구도 주목되는 연구이다.<sup>8)</sup> 선행 연구들이 공히 지적하고 있는 것은 3·1운동에서 선교사들은 모의단체에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진행단계에서 일본의 잔학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3·1운동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검토한 고정휴의 논문은 전반적인 미국의 정책을 다룬 연구이다. 이 논문이 비록 한반도에서의 기독교계의 반응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반응을 기독교계와 의회, 행정부, 언론 등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피면서 미국의 한국문제에 대한 동정적 태도를 ‘제

*Society, Korea Branch*. Vol. 54, 1979. 이 글은 이전에 발표한 아래의 자신의 글을 확대 보완한 것이다. 馬三樂(Samuel H. Moffert), 「三·一運動과 外國人 宣教師」,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그의 아버지인 모셋(馬布三悅, 1864-1939)은 평양지역의 주모자로 일본 언론에서 지목했던 인물이다. 『大阪朝日』 3월 17일 자, F. 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NY: Fleming H. Revell, 1920(연세대학교출판부, 1969재간), pp.283-284에서 재인용.

- 6) 지명관, 「三·一運動과 宣教師들」, 『기독교사상』166호, 대한기독교서회, 1972. 3; 송길섭, 「宣教師들이 본 3·1운동」, 『기독교사상』249호, 대한기독교서회, 1979. 3. 지명관은 당시 6쪽의 짧은 글에서 선교사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송길섭은 국내거주 선교사들과 총독부와의 교섭을 살폈지만 전체 선교사회와 총독부와의 관계를 다루지는 않았다.
- 7) 민경배, 「3·1運動과 外國宣教師들의 關與問題」, 『동방학지』5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 8) Donald N. Clark, “Surely God Will Work Out Their Salvation: Protestant Missionaries in the March First Movement,”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1989, Vol.13. 클라크의 연구는 미 국무부 문서를 일부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미 교회 연합회가 일본 당국과 협의하는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다.

국주의적' 전략과 연계해서 파악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up>9)</sup>

기존의 연구를 일별해보면 여전히 현지 선교사회와 본국의 선교본부 혹은 교회연합회와의 입장 차이와 미 국무부의 입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당시의 서울 총영사관의 자료와 기독교관련 자료를 활용해 현지 선교사들과 본국의 기독교계와의 관계, 서울 외교관들과 국무부의 입장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선교사들의 한국문제 인식과 개입,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이 한미관계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논의 구도 상 3·1운동의 진행 상황은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sup>10)</sup>

## II. 3·1운동의 발발과 미국 선교사들

### 1. 3·1운동의 발발과 선교사들의 관련

3·1운동은 잘 알려져 있듯이 1차 세계대전의 강화를 위한 베르사이유 조약이 체결되기 전,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동기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었다.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1919년 1월 22일 고종 황제가 붕어(崩御)한 것이었다. 고종 황제의 장례일은 3월 3일에 잡혀 있었다. 한국인 민족주의자들이 이 계기를 포착해서 국제사회에 평화적인

9) 고정휴, 「3·1운동과 미국」,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이는 당시의 1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연구는 아니다.

10) 3·1운동에 대해서는 수많은 자료와 연구서들이 있다. 그 중 가장 개괄적인 연구서로는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위의 책과 함께 동아일보사,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가 주목된다.

시위를 알리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선교사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선교사들은 계획단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이다. 각 지역의 선교사들은 계획단계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중요한 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sup>11)</sup> 물론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지식이었다. 세브란스 의원의 의사이자 당시 3·1운동의 제34인이라고 평가되었던 스코필드(Frank W. Scofield)는<sup>12)</sup> 친구인 이갑성으로부터 3월 1일 당일 시위현장의 사진을 찍어줄 것을 부탁받았다. 연희전문 부교장인 베커(Arthur L. Becker)는<sup>13)</sup> 박희도와 대화에서 만약 시위가 있다면 평화적이어야 하며 그가 간히게 되면 자신이 도울 것을 약속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회고에서 만세운동과 같은 어떤 운동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알지 못했고 또 주동자들이 자신들과 협의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잘 알려져 있듯이 16명의 기독교, 15명의 천도교, 2명의 불교계 한국인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함으로 지도부를 구성했지만 처음에는 학생조직을 중심으로 매우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시위운동 발발 후 3월 5일에서야 서울의 미 총영사는 국무성에 전보를 발송했다.<sup>14)</sup> 시위발생 후 서울 총영사는 상황 파악을 하느라 며칠을 더 보낸

11) Dae-yeol Ku, *Op. Cit.*, pp.169-172.

12) 스코필드(石虎弼, 1889-1970)는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민 가서 온타리오 수의과대학의 세균학 강사로 있다가 당시 세브란스·연희전문 교장 에비슨(Oliver R. Avison, 魚不偑)의 요청에 의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의 삶에 대해서는 정운찬, 「스코필드: 조선을 치료한 의사」, 『한국사시민강좌』34. 일조각, 2004.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청소년기에 스코필드의 영어 성서반에 참여했다. 선교사들에 대한 개별 정보는 김승태·박혜진 편, 『내한선교사 총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참조

13) 베커(白雅德, 1879-1978)는 연희전문에서 물리학 및 수학을 가르쳤다. 그의 딸 Evelyn Becker McCune(1907-현 생존)는 맥쿤 선교사의 아들인 George M. McCune(1908-1948)과 결혼했다.

14) Bergholz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3월 5일(Telegram), 895.00/569. 서울 총영사관의 문서는 거의 대부분 동경 대사관을 거쳐서 국무부 극동국으로 들어갔다. 이 문서 뒤에는 *The Milwaukee Journal*의 1916년 2월 25일자 기사, “Roosevelt the practical”이 있는데 기사의 핵심은

듯하다. 3월 7일에는 동경대사관은 서울에서 보낸 전보를 기초로, 대사관 소속의 武官의 의견을 덧붙여 국무부에 한반도에서의 3·1운동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그리고 일본 언론도 같은 날자로 북한 지역에서의 시위에 대한 일본 당국의 폭력대응을 보도했다.<sup>15)</sup> 중국 북경 미 공사관에서도 12일자로 현지 미국 신문의 보도에 기초해서 국무부에 한반도에서의 3·1운동 사실을 알렸다.<sup>16)</sup> 이 후에는 동아시아 3국의 총영사관, 공사관, 대사관 등에서 매우 빈번하게 3·1운동 소식을 국무부에 보고했다. 미국 당국은 특별한 대책보다는 상황파악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서울의 총영사관과 동경대사관이 파악한 바로는, 시위는 매우 조직적이며 평화적이었다. 당시 등교하지 않은 공사립의 학생들, 상인들, 철도노동자, 그리고 휴업한 정부산업 종사자 등 전 한국인 계층이 참여했다. 초기의 한국인들의 독립요구는 점차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사의 유지, 언론과 집회의 자유, 동등한 대우 등으로 바뀌고 있었다.<sup>17)</sup> 외교자료에 나타난 시위 현실은 3~4월이 절정기였고 당시 외교관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과 400명 이상 되는 미국 선교사들 중 반 수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평안도 지역의 시위 소식이 집중적으로 보고 되었다. 또 시위가 서울과

---

루즈벨트가 한국에 대한 조약의무를 저버리고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것은 1차 대전 시 독일의 벨기에 점령에 대해 구미권이 항의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 15) Macmurray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3월 7일(Telegram), 895.00/568. 이 문서 뒤에는 1916년 2월 21일 자 상원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조미수호조약부터 1905년까지의 조미관계에 대한 문서가 붙어있다. 이것은 3월 5일자 전보의 첨부문서와 마찬가지로 국무부 실무진 차원에서 한국의 독립관련 문제를 역사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16) Reinsch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3월 12일(Telegram), 895.00/570. 이 문서 뒤에도 흥미롭게도 Homer R. Hulbert의 *New York Times* 1916년 3월 5일 자 기고문이 붙어 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한국의 주권을 일본에 넘겼을 때 침묵했으면서도 독일의 벨기에 침략에 대해 비난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기고문은 주장했다.
- 17) Bergholz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3월 12일, 895.00/571, Reed to the Secretary of State, 895.00/572. 대사관의 직원인 Fleisher는 중국과 한국을 여행해서 사실을 탐문했는데 대개 서울 총영사관의 보고와 일치한다.

평양에서 각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는 것도 보여준다.<sup>18)</sup>

3월 16일자 서울 총영사관의 국무부에 대한 보고는 기간의 정보를 정리한 종합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3월 초의 시위 배경과 상황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인들이 고종황제의 암살소문에 많은 의미부여를 하면서 상황을 1895년 민비시해, 1907년 고종황제 폐위의 연장선에서 한국인들이 사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는 아직 사망자가 없고 평양 등지에서 16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인상적인 것은 현지 상황을 파악할 때 총영사관은 선교사들로부터의 정보와 함께 현지 신문 특히 총독부 측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The Seoul Press*』에 나타난 기사들을 자세히 발췌해서 본국에 보냈다. 이 신문에 나타난 한국인들의 시위 참여 동기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의 정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정신적 압박과 구류에의 불안감, 2. 행정개혁을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차단, 3. 왕실 토지에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의 박탈, 4. 언론통한 발언의 억압, 5.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의 금지, 6. 언론의 통제, 7. 종교 이외의 집회 금지, 8. 해외여행의 제한, 9. 공공부문에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임금, 10. 공창제의 도입 등이다. 신문은 비교적 한국인들의 불만과 열망을 잘 보도했다.

총영사관 보고서는 선교사들이 시위사태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일본 당국이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과 군인이 미국 선교사 가정과 교육기관에 이유 없이 방문하는 것(unwarranted visits)을 언급하며 총독

18) 3·1운동에 대해 현지 총영사관, 대사관과 국무부가 주고받은 문서는 대략 100건 정도 될 정도로 많다. 외교자료와 선교사들 자료가 3·1운동과 관련되어 가지는 한계는 시위 현장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서울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것이다. 이는 총영사관이 서울에 있다는 것과 평안도 지역이 최대의 기독교 포교지역이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들 자료가 말해주고 있는 흥미 있는 사실은 서울보다 지방에서 당국의 시위 진압이 더 잔인했다는 것이다. 서울과 평양에서만 3월 1일에 시위가 진행되었고 다른 지방에서는 시위 날짜가 며칠씩 늦다. 예를 들면 대구는 3월 8일이다. 선교사 숫자는 *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The Korean Situation* 2권, New York :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192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재간, p.22.

부 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도 적고 있다.<sup>19)</sup> 총영사관측이 미국인들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비교적 가치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시위의 원인과 진행상황을 잘 정리했다. 즉 미 총영사관측은 일본당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인들의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 2. 3·1운동의 국제문제화

그러나 3·1 만세운동을 단순히 한국인 대 일본당국과의 문제를 넘어서 미일간의 문제로 만든 계기가 생겼다. 그것은 일본 당국에 의해 유포된 시위운동에 선교사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주장과 만세운동에 대한 일본 당국의 잔혹한 진압에 대해 중국에서 발간되는 영미계 언론의 고발이었다. 첫째 문제 즉 선교사 관련 여부의 문제에서, 일본 당국은 시위 시작부터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다수 관여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그 뒤에는 선교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보도한 것은 군부 관련 언론들이었다. 특히 인천에서 발행되는 일본 헌병과 군대의 기관지 『朝鮮新聞』은 직접적으로 선교사들을 공격했다.

한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미국 선교사들의 죄이다. 이번 봉기는 그들의 작품이다. 소요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둘 내지 세 명의 선교사가 붙잡혀서 조사받고 있다. 선교사들 중에서 편협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민주주의라는 씨앗을 뿌린다. 그리하여 30만 조선인 기독교인들 중 상당수는 일본과 한국의 통합을 좋아하지 않고 자유를 위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강조 필자)<sup>20)</sup>

19) Bergholz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3월 16일(No.13), 895.00/589.

20) 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The Korean Situation* 1권: *Authentic Accounts of Recent*



일부 언론들은 더 나아가 시위가 미 총영사관과도 관계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연결고리가 총영사관에서 선교사를 거쳐 한국인들까지 뻗어 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당시 시위대 중 일부가 종로의 탐골(파고다) 공원에서 출발해 정동지역의 외교관 거주 지역을 방문한 것을 일본의 강경파들이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다.<sup>21)</sup>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조선인들의 타율적인 성격과 독립심 부재라는 자신들의 편견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타율적이므로 3·1운동과 같은 조직적인 비폭력 운동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군가 선동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고 일본인들은 생각했다. 총독부 당국자들은 선교사들이 관련업하다고 해명했지만 이 문제는 미국 측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히 서울지역 총영사관과 동경대사관 측은 국무부에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만세시위에 관계가 없다고 보고했다. 국무부도 현지 공관들이 일본 당국과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sup>22)</sup> 흥미 있는 것은 한국병합 직후 서울 미 총영사관의 총영사를 지냈고 당시 상하이 미국 총영사인 새몬스(Thomas Sammons)는 북경공사관에<sup>23)</sup> 보내는 의견서에서, 선교사 관련성에 대한 일본 당국의 주장은 테라우치 총독 암살미수 사건(105

*Events by Eye Witnesses*. New York :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1919,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재간, p.29에서 재인용. 낱짜는 나와 있지 않다.

- 21) 당시 3·1운동에 13세로 직접 참여했었던 피터 한(임시정부의 외무부장 현순의 아들)은 3월 3일에 수많은 학생들과 서울 시민들이 서울 공사관을 거쳐 창덕궁 근처로 모여들었을 때 일본 기마대가 사브르 칼을 사용해 잔인하게 한국인들을 살상했다고 회고했다. 시위대는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Peter Hyun, *Man Sai!: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6, pp.6-11.
- 22) Reed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3월 15일(Telegram), 895.00/572. 이 보고서는 학교와 병원 선교사들의 서류지에서 문서가 인쇄된 것은 사실이지만 선교사나 총영사관의 개입은 없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측 언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23) 당시 미국은 일본 동경에 대사관, 중국 북경에 공사관, 서울에 총영사관(독립국가내의 수도가 아닌 곳의 외교 공관)을 설치해두었는데 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가장 중시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인 사건')시 보여준 일본의 태도와 같다고 주장한 상하이의 미국계 신문 『*The China Press*』의 3월 12일자 기사를 소개했다. 이러한 해석에 주일 미 대사관도 동의했다.<sup>24)</sup>

서울 미 총영사관 측과 동경 미 대사관 측은 일본 당국에 이 문제를 항의했는데 총독부와 일본 외무성은 항의를 받아들여 일본 내의 반 선교사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신들의 조사에 의하면 선교사들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발표요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조선과 일본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선교사와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관련성을 암시하고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기사들이 자주 등장했다.<sup>25)</sup> 이렇게 당국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근본 이유는 바로 군부와 경찰들이 총독부 고위층과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sup>26)</sup> 결국 3·1운동의 해결방식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일본 본국의 영미와의 협조를 강조하는 민간관료와 총독부 고위관료들의 생각이 현지의 군부와 경찰의 불만을 압도했던 것이다.

3·1운동을 일본 식민지 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로 만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평안도 지역의 선교사들이 3·1운동이 발발한 즈음에 텐진과 상하이로 가서 영미계 신문에 한국인들의 자유선언과 시위에 대한 일본의

24) Thomas Samm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3월 12일, 895.00/588, Embassy at Yokyo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3월 8일(극비), 895.00/587.

25) 대표적인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신문인 *The Japan Advertiser* 3월 11-12, 15일 자의 기사로 선교사들은 이번 소요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지의 언론과 당국이 공식적으로 관련성을 부인했다. 총독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The Seoul Press*의 1919년 3월 14일 사설. 앞의 *The Korean Situation*. 1권, p. 24, 52. 일본 신문은 *American Embassy in Tokyo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3월 21일, 895.00/586에서 소개됨.

26) Alston to Curzon, 1919년 5월 30일, F. O. 371/3817(81876/7293), 구대열, *Ibid*, p. 188에서 재인용. 일본외무성은 총독부의 군부 식 일처리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군부와 민간관료의 대립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2차 대전 전 일본 외교 노선의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는 아키라 이리에(강성환 역), 『일본의 외교』, 푸른산, 1995 참조

강압적인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기고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 언론에 보도된 일본의 시위 탄압내용이 국무부에 타전되면서 미국 정부도 알기 시작했다. 3월 중순 이후 현지 미국인 선교사들은 개인적 서신을 통해 시위진압과정의 참상에 대해 미국 사회에 자세한 소식을 전함으로써 미국 사회에도 비교적 자세히 시위진압의 참혹성이 알려지게 되었다.<sup>27)</sup> 이전의 청일, 러일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1차 대전 종전 후에도 일본은 영미의 입장에 주의하면서 자신들의 동아시아에서의 권익을 지키려고 했으므로 이러한 영미 선교사들의 움직임은 일본 당국을 곤혹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일본 수상 히라는 한창 시위활동이 벌어지는 3월 11일 조선총독에게 보낸 지급(至急) 전문에서 “이번의 소요 사건은 내외에 대해서 표면상 아주 경미한 문제로 보이게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면에 있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단, 그 조치는 외국인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이므로 잔혹하다거나 너무 심하게 사찰한다는 비평을 듣지 않도록 심분 주의하기 바람”이라고 하면서 미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sup>28)</sup>

3·1만세운동의 진압에 대한 참상은 중국현지의 영미계열의 신문인 『The Peking-Tientsin Times』, 『The North China Star』, 『The China Press』 등의 보도에 의해 일본 당국의 잔혹한 진압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 현지의 선교사들도 총영사관에 일본 당국의 잔혹한 진압을 비판하는 글들을 보냈다.<sup>29)</sup> 그러므로 이 문제는 선교사의 개입여부와 진압방식의 잔인함이라는 점에서 미·일간에 국제문제화 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한국인

27) 앞의 『The Korean Situation』은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들을 중심으로 편집한 책자이다.

28) 姜徳相 編 『現代史資料: 朝鮮』I. 東京: みすず書房, 1967; 고정휴, 앞의 글 448쪽에서 재인용.

29) 1919년 3월 미 국무성자료 곳곳에 현지신문의 보도가 첨부되어 있다. 또 The Korean Situation. 1권, p.25에도 소개됨.

들에 대한 잔인한 진압과 대처 방식이 일차적으로는 해외언론과 기독교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sup>30)</sup>

특히 세 가지 사건이 부각되었다. 첫째는 세브란스에서 치명상은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경찰의 수속과 이송문제이다. 3월 초 시위가 발생한 후 일본 경찰의 잔인한 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많은 한국인들이 시위 현장과 가까운 당시 남대문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브란스 병원으로 몰려왔다. 이들은 칼이나 총에 맞아서 중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병원 의사이자 선교사인 스코필드나 에비슨에 의해 관련 사실들이 해외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4월 10일에 일본 헌병대가 병원에 들이닥쳐 중상으로 누워있는 5명의 사람을 헌병대로 이송하겠다고 했다. 병원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중 3명이 헌병대로 이송되었고 그 잔혹함에 선교사들이 분노했다.<sup>31)</sup>

둘째는 3·1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인 수원지역의 제암리 사건이다.<sup>32)</sup> 제암리 사건은 특히 서구 언론에 감리교 교회가 불타는 사진이 게재됨으로 일제가 기독교 탄압을 하고 있다는 좋은 선전거리가 되었다. 아울러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독립운동가들 이승만, 서재필 등은 일제의 기독교 탄압과 한국에 대한 탄압을 동일시했으므로 그러한 이미지가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천도교인들이 3분의 2가 될 정도로 더 많았다. 수원지역에서 조직적인 일제의 교회방화와 학살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미 총영사관의 영사 커티스(Raymond Curtice)와 연희전문학교의 교수이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2세(Horace H. Underwood), 그리

30) 한국인 개인들에게 가한 끔찍한 강경진압과 수감 중인 시위 참여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가한 잔인한 고문방식은 *The Korean Situation*. 1권 곳곳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31) "Statement Concerning Removal of Wounded Men From Severance Hospital," *The Korean Situation*. 1권, pp.44~47.

32) Bergholz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4월 23일(No. 23), 895.00/625, *The Korean Situation I*, pp.68~72, 74~81에 소개. *The Japan Advertiser*, 1919년 4월 29일 자에 상세히 보도됨. 즉 조사단 3명이 각각 관련되는 문건에 기고함으로 이 사건은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 당시 일본영자 신문 『The Japan Advertiser』의 기자로 구성된 조사단이 4월 16일에 이 지역을 방문했다. 원래 방문하려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연기가 나는 지역이 있어서 관할 파출소에 들러 조사를 위한 허가를 받아 접근했다. 잘 알려진 대로 조사단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감리교 회당에 집합된 뒤 집중적인 총격에 사망했던 현장을 목도했고 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아 울러 주변 15군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설명을 인력거꾼으로부터 들었다. 그리하여 원래 가려던 곳으로부터 발을 돌려 이곳만 취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sup>33)</sup>

이 사건이 알려진 후 1919년 4월 24일 선교사 대표단이 총독을 방문해서 학살에 대해 항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암리 사건의 희생자들은 주로 기독교인들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천도교측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국제적 변호인들이 없었던 것이다. 일본 국내 정치에 수상으로 참여할 의사가 강했던 하세가와 당시 총독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급 관리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sup>34)</sup>

세 번째 잘 알려진 잔혹함은 선교사들의 집에 대한 무차별한 수색이었다. ‘105인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모펏(Samuel A. Moffett) 선교사집에 대한 수색을 필두로 평양지역 선교사들의 집에 대해 무차별적 수색이 이루어졌다.<sup>35)</sup> 이 과정에서 모우리(Eli M. Mowry) 선교사의<sup>36)</sup> 가정에 한국인

33)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895.00/625에 첨부된 Curtice가 총영사인 Bergholz에게 제출한 4월 21일 자의 설명서 참조

34) *The Japan Advertiser*, 1919년 4월 27일. *The Korean Situation* I, 72-74에 실려 있다.

35) 모펏집인에 대한 수색의 내용은 아들인 Samuel H. Moffett의 앞의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당시 수색당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助事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 *The Korean Situation* I, pp.57-60.

36) 모우리(牟義理, 1880-1970)는 북장로교 선교사로 1909년 내한해서 평양중심으로 활동했다. 3·1운동 당시 시위 참가 한국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어 6개월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1918년부터 숭실에서 생물학, 과학교수를 역임했다. 김승태·박혜진, 앞의 책, 392쪽. 해방 후 3·1운동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시위자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시위운동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실형을 받은 외국인이 되었고 해방 후 한국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았다. 무자비한 수색은 일본인들이 서구적 기준의 법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외국인들에게 심어주었고 그 점은 일본 당국으로서도 뼈아픈 지적이었다. 왜냐하면 일본 당국이 한반도에서 행한 ‘법치’를 포함한 문명화사업이야말로 일본에 대한 합리화의 근간이었기 때문이었다.

### 3. 재한선교사들과 총독부의 회담

해외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총독부는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교사들을 회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몇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개최했다. 선교사들과 총독부측은 세 차례 정도에 걸쳐 ‘비공식적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 회담은 당시 서울에서 가장 좋은 연회장인 조선포텔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로 그 비중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회담에서 총독부 당국자들은 어떻게 선교사들이 사전에 한국인들의 시위를 알지 못했는지를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한국인들을 말릴 것을 우려해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에게 일절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까지 가장 친일적인 선교사로 알려진 게이일(James S. Gale)도<sup>37)</sup> 일본의 잔혹한 통치방식과 동화정책의 파탄에 대해 말했다. 결국 이 회담에서 당국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sup>38)</sup>

37) 게이일(奇一, 1863-1937)은 1888년 캐나다 선교사로 입국했다가 미 북장로교로 교파를 바꾸었고 한국 YMCA 창립에 깊게 관여했다. 당시 선교사들 중 드물게 한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몇 권의 책도 저술했다. 한국사연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재한 선교사들에게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승태·박혜진, 앞의 책, p.260~261쪽.

38) 1차 회담의 내용은 Enclosure in Royds to Greene, 1919년 3월 14일, F. O. 361/3817(61582/7293),

&lt;표 1&gt; 조선총독부 당국자와 선교사의 회담

개최일자	참여자(선교사측)	참여자(일본 당국)	토론내용
1919년 3월 9일	9명: F. H. Smith(Gerdine?), Noble, Sharrocks, Bernheisel, Bunker,(이상 미국), Avison, Gale, Miller, Hardie (이상 영국, 캐나다)	내무국장(우사미) 등	사전준비모임, 상황과악
3월 22일 (조선호텔)	Bishop Welch, Avison, Moffett, Gale, Gerdine, Hardie, Brockman, Whittemore, Noble, Bunker(총 10명)	법무국장(코쿠보), 학무국장(세키야), 조선은행장, The Seoul Press 편집인(10명)	선교사들 통한 한국인 시위 막는 방안 논의
3월 24일 (조선호텔)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비고: Dae-yeol Ku, *Korea Und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nglo-Japanese Relations*. The Royal Asiatic Society, 1985, pp.178-181, Samuel H. Moffett, "The Independent Movement and the Missionaries,"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Vol.54, 1979, pp.17~21 참조

상황이 심각해진 3월 경순 이후 일본 당국은 선교사들을 소집해 그들을 통해 한국인들을 자제시키는 방법을 모색했다. 참여한 선교사들은 서울과 평양의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이 두 모임 중 첫 번째(3월 22일)에서 선교사들은 일본 행정 당국이 한국인들의 정신적 측면을 무시했다고 했다.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회담(3월 24일)에서 당국은 선교사들에게 좀 더 한국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자신들에 의해 이 운동이 사주 받은 것도 아니고 만세시위가 기독교 운동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친일주교로 알려진 감리교의 웰치(Herbert Welch) 주교도 중립을 지키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것도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아울러 이는 본국 정부에 의해 금지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sup>39)</sup>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회담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 없다

Ku, *Ibid.* pp.175~176에서 재인용. 이 일련의 회담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자세한 분석이 있으므로 간단히만 언급하고자 한다.

39) 이 회담의 핵심적인 사항은 *The Korean Situation I*, pp.27~29.

고 판단한 선교사측은 더 이상의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당국도 동일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

세 번에 걸친 총독부 당국과 현지 선교사들의 만남에서 발표된 선교사들의 입장 중 흥미로운 것은 1910년대 군부 통치 하의 일본 당국의 언론 자유의 부재, 조선인 차별문제 등과 더불어 동양평화를 위한 한반도 합병이라는 일본의 한반도정책의 정당화에 명백히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인들의 ‘독립’을 언급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 북장로교 조선선교회 실행위원회는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한국의 ‘독립’문제를 언급하는 건백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조선선교회 실행위원회의 조선 ‘독립’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의해 거부되었다.<sup>40)</sup> 이 부분은 일본 당국에게 매우 걸끄러운 문제였음에 틀림없다. 일본 당국은 미국 기독교측이 요구하는 조선에서의 좀 더 ‘인간적인’ 처우를 포함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sup>41)</sup>

조선 주재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탄압받는 것에 동정을 표하면서도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자신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포교활동의 근간조차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 당국에 가능한 영향력을 사용해서 ‘진정한 종교적 자유’를 획득할 목표를 수립했다. 선교사들이 보는 ‘진정한 종교적 자유’란 바로 선교와 기독교 교육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1915년에 통과

40) “The Present Movement for Korean Independence in its Relation to the Mission Work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 Private Report Prepared for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hosen Mission at Seoul, April 22nd-24th, 1919”이다. 자세한 내용본 석은 Samuel H. Moffett, *Op. Cit.*, pp.27~28.

41) 물론 이것이 선교사들과 영미 측의 압력만으로 20년대 ‘문화통치’ 도입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1차 대전 이후 구미사회의 ‘개조’에 대한 열망과 그것의 일본판인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요구, 또 한국인들의 3·1운동에서 보여준 강력한 개혁의지 등 여러 요인이 합쳐진 것이었다.



된 사립학교법 중 정규교육에서 종교교육이 삭제된 것에 대해 선교사측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회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위진압에 대한 참상이 미국 국내에 소개됨에 따라 선교사들과 일본 당국과의 교섭문제는 본국의 해외 선교본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 Ⅲ. 미국 기독교 기관들의 대일본 접촉과 미일 타협

#### 1. 미 선교본부에의 압력과 미 교회연합회의 대응

민간부분의 여러 경로를 통한 대일 비판에 직면한 미국 정부 당국은 한 국민들의 3·1운동에 나타난 일본의 잔인한 진압에 대해 일정하게 일본 외무성에 항의를 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방식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1차 대전의 전후 처리문제를 확정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을 일본 영토에서 떼어내려는 어떠한 입장에도 반대했다. 아울러 그러한 정책에는 이들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국병합’ 전의 조선의 독립능력부재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인식의 기저를 이루고 있었다. 조선의 독립능력부재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의 흐름이 그것이다.<sup>42)</sup> 전체적으로 영미 양국은 1차 대전의 처리를 위해 베르사이유에서 합의한 패전국 독립 안에 배

42)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1: 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 역사비평사, 1995, 제4장 「3·1운동과 열강」을 참조. 한일합방 전 조선과 대한제국에 대한 열강의 인식의 해방 당시 까지의 지속성은 위의 책과 함께 동 저자의 『한국국제관계사 연구 2: 해방과 분단』, 역사비평사, 1995의 주제식이다. 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잘 밝혀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지만 인식의 지속성만으로는 해방 후 각 국면에서 취했던 미국의 대한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식의 지속성은 정책적 판단의 종속변수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치되는 한국인들의 독립안에 대해 철저하게 반대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기관은 선교현지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일찍부터 원칙으로 했으므로 현실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서 선교사들이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며 일을 해야 했으므로 일제 당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활동은 할 수 없었다.

선교사들은 글과 사진을 통해 본국 선교본부에 조선인들의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므로 선교본부에서도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1919년 4월부터 미 해외 선교본부에는 수많은 현지의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인 암스트롱(A. E. Armstrong)은 당시 10개월 동안 중국, 만주, 조선, 일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3월에 해외선교부로부터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고 3월 16일 서울에 도착해 3일 동안 만세운동에 대해 조사를 하며 정보를 얻었다. 그는 4월에 뉴욕에 들어와 현지 사정에 대해 미국의 각 선교위원회들에 한국의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각 선교위원회들은 개별 교파선교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보다는 교파들이 연합해서 먼저 실상을 조사하고 일본인들과 정부에 이 문제를 언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미국 개신교 각 교파의 연합회인 미국 교회연합회(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는 연합회 산하 동양관계위원회(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Orient)를 통해 이 문제를 조사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와 일본 정부는 서신 왕래를 통해 처음부터 교섭했다. 그것은 동 위원회가 편찬한 『The Korea Situation』에서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다.<sup>43)</sup> 먼저 동 위원회는 뉴욕의 일본 총영사 야다 초오노스케(矢田長之助)에게 4월 경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야다 총영사는 외무대신 우치다 코

43) 이 위원회의 친일성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민경배, 앞의 논문, 220-227에 잘 논의되어 있다.

오사야(内田康哉)에게 보고했고 아다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아서 미 교회 연합회에 전달했다.

하라 수상은 지난 얼마동안 조선의 정무에 개혁을 도입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현재 개혁의 실현을 위한 최상의 방법에 대해 특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혁은 외국 언론이 성급하게 부가적인 선동(excitement)을 한다면 심각히 방해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영사는 위의 상황을 미국 교회연합회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현재 문제에 행동을 취하도록 한 그들의 우호적인 정신에 대해 우리 측의 감사를 전달하라. 또한 이 문제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에 대해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그들의 정상적이고 온건한(sane and moderate) 태도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수상의 바램이다.”<sup>44)</sup>

위의 서신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 당국의 식민통치의 개선안과 함께 그것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미 교회연합회의 자중을 은근한 협박과 더불어 요청하고 있다. 이는 물론 일본 당국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하라 수상의 개혁안 문제는 사실상 변명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동 위원회는 1919년 6월 26일에 하라 수상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일본 당국의 비인간적인 탄압에 대한 답을 요구하면서 “탄압(abuses)이 중지되었고 합리적인 행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공식 성명을 당국이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선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동 위원회는 새로 임명된 하라 수상으로부터 1919년 7월 10일자로 “지난 9월 1일(1918: 필자) 현 내각이 조성된 이래 나는 한국에서 필수적인 행정개혁을 입안하는데 몰두해왔습니다. 이 목적을 가진 광범위한 재판개

44) 1919년 5월 15일 자 Yada to the Commission 전신, *The Korean Situation* 1권, 서문에서 재인용. 일본 측의 입장이 미 교회 연합회 자료집 서문에 실려 있는 것 자체가 이 협의회 자료의 정치성을 보여준다.

획이 심의되고 있습니다”는 답변을 듣게 되고 그러한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게 되었다.<sup>4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관계위원회의 비공개적인 접근에 대해 미국 사회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국현지 조사 자료를 넘겨준 캐나다 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암스트롱도 동 위원회의 미진한 입장을 강력히 항의했다.<sup>46)</sup> 그리하여 동 위원회로서는 미 교회 연합회 전체 차원에서 무언가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었다. 결국 그러한 이유로 1919년 7월과 20년 4월에 각각 3·1운동에 대한 자료를 발간해서 위원회가 일본 당국에 대해 일정한 압력을 구사했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다.<sup>47)</sup>

이 자료들은 미 기독교계의 3·1운동에 대한 반응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1권의 서두에서 위원회는 이 책의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비인간적인 처사와 불의로부터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에서 건전하고 계몽된(sound and enlightened) 여론을 통해 일본에서 진보적이고 반군국주의 세력을 강화시켜 식민지 조선에서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적 독립이 주어

45) 1919년 6월 26일 자 The Commission to Premier of the Japanese Cabinet, 7월 10일 자 Premier of the Japanese Cabinet to the Commission 전신, *The Korean Situation* 1권, 서문에서 재인용.

46) A.E. Armstrong to Sidney L. Gulick, 1919년 5월 19일 자, A.E. Armstrong to Arthur J. Brown, 1919년 6월 20일, (캐나다 聯合教會史料館所藏), 민경배, 앞의 논문, pp.223~224쪽에서 재인용. Gulick은 미 교회연합회의 총무였고 브라운은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였다. 브라운(1856-1945)은 1895년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위원회 간사로 들어온 후 1903년부터 1929년까지 무려 26년간 해외선교부 총무로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다. 암스트롱은 길리크의 일본 정부와의 협상과 자료집 간행의 지연을 강력히 항의했다.

47) 이 자료집은 원래 『독립운동사 자료집』 4집, 3. 1운동사에 번역되어 있다. 1권의 원문은 *The Korean Situation: Authentic Accounts of Recent Events by Eye Witnesses*이고 2권은 *The Korean Situation*이다. 동양관계위원회의 교섭 경위에 대해서는 위의 1권, pp.5~6을 참조

야 하는 문제는 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했다.<sup>48)</sup> 이 자료집의 편집자들은 일본 내에서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것은 군국주의세력 대 반군국주의세력의 대립이라는 이항구도였는데 특히 후자는 자유주의적이며 진보적인 집단으로 해석되었다. 미국의 여론이 후자를 강력히 지원해야지 한국문제만 아니라 중국과 전 세계에서 시민적 자유와 민중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49)</sup>

이러한 일본 내부의 ‘온건파’에 대한 믿음은 1911~12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105인 사건’에 대한 북 장로교 해외선교회 총무 브라운의 판단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sup>50)</sup> 즉 미국 교회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는 조선인들의 독립요구는 자신들의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일본의 반군국주의세력의 좀더 온건한 식민지 경영을 선호했던 것이다. 이 점은 동 위원회가 식민지배와 온건한 지배집단의 존속은 충분히 양립가능하다는 가정 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1920년대 혹은 적어도 30년대 중반까지 미일 협조가 가능하다고 본 미국의 지식인들의 입장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일본 식민지에서 두 가지가 양립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탈식민주의적 인식과는 대비된다.

이 책은 앞에서 언급한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48) *The Korean Situation* 1권, pp.6~7.

49) *The Korean Situation* 1권, p.8.

50) Arthur J. Brown, *The Korean Conspiracy Case*(NY: 156 Fifth Avenue, 1912), pp. 1-3. 브라운의 입장은 ‘105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들(일본인들, 필자)이 나쁘게 행동해서 한국기독교인들에 대한 존경을 빼어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동시에 명확한 것은 선교사들과 선교본부가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명확하다”라고 주장한 것에서 보듯이 브라운은 일본 당국의 입장과 선교사들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 Arthur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95 복간), p.575, 606도 참조. 브라운의 생각은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했던 미국의 타교파 해외선교부 총무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이 요구하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 태형의 폐지, 기독교 박해의 중지 등이었지만 조선의 독립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미국 교회연합회 입장에서 국무부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독립여부를 일본 당국에 제시할 입장은 아니었다. 결국 일본 당국의 시위에 참가한 한국인에 대한 잔인한 대응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한 이 책자의 결론은 당시 미일관계에서 국무부의 매우 현실적인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었다. 일본 당국의 독일식의 잔인한 통치를 반대하면서, 미국이 취할 입장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인륜과 정의’의 관점에서 식민통치를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서 군사적으로 떼어내는 작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국인들이 독립된 민주적 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자기통제 훈련과 시민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것은 야만성과 기독교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문제를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미국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만 등 많은 한국인 민족주의자들의 주장, 즉 일제는 식민지조선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는 입장과 사뭇 다른 것이다. 미국 교회 연합회의 입장은, 당시 미주 내에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한, 한국=(미래의)기독교 국가라는 전략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1919년 4월 14일에서 1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한인회의(First Korean Congress)에서 이승만, 서재필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회원들이 주동이 되었다. 이 모임은 기독교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나와 한국독립을 위해 기도한다든가 연설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하며 한국의 기독교 국가화를 막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sup>51)</sup>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 이승만은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일본의 자치나 연방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자결에 기초한 독립이 중

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행위는 반 민족주의적이면서도 반 기독교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방해하고 있으며 일본의 이상은 한국의 이상들(민주주의와 기독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sup>52)</sup> 당시 이러한 임시정부 구미위원부가 미국에서의 여론 촉구에서 한국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는 전략을 취한 이유는 미국 내에서 한국 민족주의자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교회들을 중심으로 대 정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은 일정하게 효과가 있어서 미국 내 수많은 교회로 하여금 국무부가 일본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것을 주장했다.<sup>53)</sup> 그러나 미 교회연합회 측은 일본 당국은 정치적 반역을 억제하는 것이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sup>54)</sup> 유사한 입장을 취한 미 국무장관은, 시위 사태가 진행되자 외교관들에게, 양국의 책임 있는 언론들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할만큼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sup>55)</sup> 즉 미국 기독교

51) 이 회담의 진행과정은 소책자로 다음의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Bureau of Inform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Philip Jaisohn) to Robert Lansing, 1919년 7월 30일, 895.00/647.

52) Chairman, Korean Commission(구미위원부) to Robert Lansing, 1919년 8월 28일, 895.00/655. 이승만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임시정부의 헌법을 소개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의 의사를 대외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이승만의 위와 같은 일본 통치에 대한 비난 방식이 그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한 영미의 위입통치를 주장한 배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일본보다는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신봉하는 영미가 낫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물론 그것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강력한 비판대상이었다.

53) 수십 개의 교회와 관련 조직들이 국무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들면 다음과 같다. The Men's Club of Pasadena Presbyterian Church to Robert Lansing, 1919년 10월 22일, 895.00/664, Friends of Korea to the Secretary of State, 1920년 3월 29일, 895.00/675의 The Pastor's federation of Washington의 한국 결의안 등. 이들도 한국과 기독교를 등치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다.

54) 3·1운동에 대한 미국 교회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의 총괄적 결론은 The Korean Situation 2권, pp.24~25.

55) Reed(동경대사관)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3월 15일 전보에 대한 3월 17일 국무장관

연합공의회는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다룬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기독교 탄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 2. 재한선교사 연합공의회 총독부에 대한 질의

미국 교회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의 1919년 7월의 책자 출간(1권)은 일본의 개혁약속과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같은 해 8월 말 齋藤實 총독<sup>56)</sup>과 水野鍊太郎 정무총감<sup>57)</sup>이 새로이 식민지에 부임해왔다. 이러한 기회를 맞이하여 재한선교사 연합공의회(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는 총독과의 면담기회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종교자유’에 대한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했다. 재한선교사연합공의회는 사이토 총독을 만나기 위해 보고서를 준비했다.<sup>58)</sup> 이 보고서는 선교사들이 제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제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핵심은

---

(Acting Secretary)의 답변, 895.00/572, Gray(파리대사관)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3월 18일 전보에 대한 19일의 답변.

- 56) 사이토(1858-1936)는 해군병학교를 거쳐 워싱턴 일본공사관 소속 해군무관을 거쳐 해군대신(1906-1914)을 거쳐 제 3대 조선총독을 맡았다. 1930년 워싱턴 해군군축회의의 일본 대표였다. 1932년 내각 통리대신에 올라 만주국을 승인하고 국제연맹에서 탈퇴했지만 1936년 ‘2·26사건’당시 청년장교들에게 살해당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미협조주의자로 알려졌다.
- 57) 미즈노(1868~1949)는 도쿄제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내무성 지방국장, 내무차관 등을 역임하고 1918년 데라우치 내각의 내무대신을 지냈다. 한국재임(1919.8~1922.6) 후에도 일본 내에서 내무대신을 두 차례(1922-23, 1924) 역임한 내무계통의 최고권위자였다.
- 58) 이 보고서의 제목은 “A Communication to His Excellency, Baron Saito, Governor-General of Chosen from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이하 Communication으로), Leo Bergholz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10월 27일(No. 109), 895.00/667의 첨부자료이다. 재한 선교사연합공의회 명으로 1919년 9월 29일 작성되었는데 당시 공의회 회장은 밀러(Hugh Miller), 총무는 빌링스(B. W. Billings)였다. 선교사 공의회에서 서북 지역 선교사들이 불참한 것이 공의회 제출 보고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민경배, 앞의 논문, 219쪽)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바로 종교와 교육의 자유에 관한 문제였다. 핵심적인 건의 사항은 여섯 가지였다.

우선 선교사역과 관련해서 교회와 선교사들에 대한 제한이 훨씬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회를 세우는 데도 관리들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일반적인 성경공부 모임이나 집회에도 간섭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선교사들은 늘 경찰에 의해 감시를 받았고 방문을 받는 사람은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했다. 이것은 사실상 종교포교에 대한 규책(1911)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이는 관리들에 의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에 대한 차별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었다.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교회의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가르침을 교사로 부터 받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 비해 더 많은 학대를 받았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불만사항이 있을 때 정부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sup>59)</sup>

두 번째 교육에 대한 문제도 법령개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가장 우선 문제가 된 것은 비록 10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종교교육을 정규 학교 과정에서 삭제하는 1915년의 사립학교법의 개정이었다. 선교사들은 교회학교에서 성경과 종교적 행위를 정규 과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일본 본국의 사립학교에 허용된 권리를 그대로 식민지에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과 학교운영의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국가의 식에서의 교사와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의 허용을 요구한 것이었다. 천황의 사진과 천황숭배 등의 의식에 기독교인들이 자율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천황의 사진이나 천황에게 경례하는 것까지는 인정했던 식민지 후기의 보수적 선교사들의 입장보다 더욱 종교의

59) 선교 관련은 *Communication*, pp.2~4.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교육문제에서 더 요구된 사실은 한국인들이 일본인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것, 교재선택의 폭과 재량권을 더 허용할 것, 한국과 세계사에 대한 교육제한을 없앨 것 등이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부허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졸업생들이 같은 급의 정부 소속 학교에 수여된 특권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교사가 되는 기준에서 당시 대학보다 격이 낮은 정부 소속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평양의 숭실대학<sup>60)</sup>을 졸업한 학생들과 달리 교사자격 시험을 면제받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sup>61)</sup>

세 번째 건의사항은 의료와 관련된 것으로 선교사들은 병원운영예를 들면 직원의 수나 월급에서 보다 자율적이 되기를 희망했다. 네 번째는 기독교서적 보급과 관련된 문제로 검열의 완화와 교계 언론의 다양한 소식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기독교계에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책을 팔러 다니는 勸書人에 대해 지방 관리들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했다. 검열문제는 1911년 언론법 수정과도 관련이 있다.<sup>62)</sup> 다섯 번째 중요한 사항은 바로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문제로 이 문제는 여전히 구한말에서 내려오는 관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즉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법인체로 등록되지 못하고 개인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개인의 사망, 이사, 여행 등에 따라 늘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것은 교회에 불만이 있는 지방 당국으로 하여금 교회나 선교사들을 쉽게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였다. 게다가 병원 학교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와 그 허가를 규정한 법은 너무나 엄격한 것이었다.<sup>63)</sup> 여섯

60) 비록 숭실대학은 1925년에 전문학교로 인정받았지만 당시 이미 대학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므로 대학의 명칭을 사용했고 영문 명칭은 Union Christian College이다. 한편 연희전문은 전문학교로 1917년에 인정받았고 당시의 영문 명칭은 Chosen Christian College이다.

61) 교육 관련은 Communication, pp.4-6.

62) 의료사역과 기독교 서적발간 문제는 각각 Communication, pp.6-7과 7-8.

번째로 제기한 문제는 도덕적 문제였다. 특히 공창제, 마약 등이 조선의 젊은이들을 타락하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것이었다.<sup>64)</sup> 이는 청교도적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에게는 지극히 합당한 요구이다. 결론적으로 3·1운동에서 보여준 경찰과 헌병의 잔인한 진압에 대해 선교사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의한 태형과 즉결심판을 통한 조선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철폐를 요구했다.<sup>65)</sup> 상당부분 선교사들의 입장은 총독부에 의해 시차를 두고 받아들여졌다. 그것이 3·1운동 후 1920년대 선교사들과 총독부 사이에 일정한 협력을 가져왔다. 그러나 3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군국주의의 강화와 함께 다시 선교사들과 총독부는 긴장관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조선 주재 선교사들의 활동이 종교의 자유를 넘어 일본내부의 정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부는 서울 총영사관을 통해 선교사들의 정치문제 개입에 비판적인 문서를 보냈다. 국무부는 불필요하게 선교사들이 국내 내정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구한말에 발송한 정치 불간섭에 대한 원칙을 다시 총영사관이 선교사들에게 회람시킬 것을 지시했다.<sup>66)</sup> 이것은 일부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반도의 ‘독립’ 가능성을 주장한 것을 우려한 미 당국의 입장 표명이었던 것이다. 국무부의 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동양관계위원회의 결론과 매우 유사한 정신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일본의 잔인한 탄압에 대해서 반

63) Communication, pp.8~9.

64) Communication, pp.9~10.

65) Communication, p.11.

66) Wilbur J. Carr(Acting Secretary) to Ransford S. Miller, 1919년 12월 26일(No. 7), 이 문서는 Leo Bergholz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9년 10월 27일(No. 109), 895.00/667의 문서에 대한 답변이다. 미 국무부는 일찍이 1897년에도 당시 서울 주재 미 공사관의 실 공사에게 선교사들의 한국 내정 문제 개입을 강력히 경고하는 회람을 작성해서 보낸 경험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pp.100~117쪽 참조.

대하지만 미일관계가 파괴되지 않게 일본의 통치방식의 개선을 위해 조심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 IV. 맺음말

3·1운동이라는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한 한국인들의 봉기에 직면한 일본은 1차 대전 직후에도 여전히 영미협조노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외에 식민지조선에 대한 ‘개혁’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적극적으로 구미사회에 일본의 진압방식과 식민통치를 비판한 선교사들의 주장은 비록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식민지에서 정치와 교육, 종교문제가 구별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교육과 종교에 대한 법과 규칙을 바꾸거나 완화해달라고 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현지 선교사들의 입장과 달리 미 교파 해외선교부나 교회연합회, 그리고 미 국무부는 되도록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만 일본 통치의 온건화를 희망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는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진행되어 감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해방 후까지 한국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차로 남게 되었다. 3·1운동에 대한 각 개신교계와 외교관들의 입장은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3·1운동 후 일본 당국은 사이토 마코토라는 해군측의 온건파와 행정전문가인 미즈노 렌타로를 정무총감으로 임명해 조선행정을 책임지게 했다. 새로 한반도에 부임하던 1919년 9월 2일 사이토는 비록 남대문 역(현 서울 역)에서 강우규의 폭탄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서울에 들어와서 예정대로 자신의 개혁구상을 발표했다. 잘 알려진 대로 ‘문화통치’의 기본 기조는 현

병경찰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한국인들의 언론, 집회, 출판 등에서 숨통을 일정하게 트게 하는 것 등이었다.<sup>67)</sup> 식민당국이 한국인 민족주의자들에게 일정한 활동공간을 보장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드러난 것처럼 ‘문화통치’는 식민지 내에서 다양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어떤 의미에서 조선에서 식민통치자와 일부 조선인 지식인들의 담론이 ‘문명’에서 ‘문화’로 변화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즉 개화기와 마찬가지로 당시 한국인들은 3·1운동에서 미국측의 개입을 기대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의 독립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문명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보다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후에는 독립이 아닌 문화적 주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즉 식민지조선에서는 이후 정치적인 독립보다는 문화적, 경제적 문제로 일부 조선인 지식인들의 관심사가 옮겨가기 시작했다.

논문투고일 : 10월 1일      심사완료일 : 10월 26일

주제어 : 3·1운동, 선교사, 중립성, 미국교회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 재한 선교사연합공의회, 미일회담

67) 자세한 것은 『매일신보』 1919년 9월 3일 참조 『조선총독부관보』는 9월 4일.

■ 참고문헌

- 미 국무부 문서 895.00시리즈(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의 사본, 원본은 미국립, 문서보관소(NARA)소장)
- 김승태·박혜진 편, 『내한선교사총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 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The Korean Situation* 1권: *Authentic Accounts of Recent Events by Eye Witnesses.*, *The Korean Situation* 2권, New York :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1919, 192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재간.
- 고정휴, 『3·1운동과 미국』,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1: 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 역사비평사, 1995.
- \_\_\_\_\_, 『한국국제관계사연구 2: 해방과 분단』, 역사비평사, 1995.
- 동아일보사, 『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 동아일보사, 1969.
- 류대영, 『초기미국선교사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민경배, 『3·1운동과 外國宣教師들의 關與問題』, 『동방학지』5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 송길섭, 『선교사들이 본 3·1운동』, 『기독교사상』249, 대한기독교서회, 1979. 3.
- 아키라 이리에(강성환 역), 『일본의 외교』, 푸른산, 1995.
- 정운찬, 『스코필드: 조선을 치료한 의사』, 『한국사시민강좌』34, 일조각, 2004.
- 지명관, 『三一운동과 宣教師들』, 『기독교사상』166, 대한기독교서회, 1972. 3.
- Baldwin, Frank "Missionaries and the March First Movement: Can Moral Men be Neutral?" Andrew C. Nahm ed.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MI: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3.
- Brown, Arthur J.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1995 복간.
- \_\_\_\_\_, *The Korean Conspiracy Case*(NY: 156 Fifth Avenue, 1912)
- Clark, Donald N., "Surely God Will Work Out Their Salvation: Protestant Missionaries

- in the March First Movement,”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1989, Vol.13.
- Hyun, Peter, *Man Sei!: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6.
- Ku, Dae-yeol, *Korea Und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nglo-Japanese Relations*. The Royal Asiatic Society, 1985
- F. A. McKenzie, F. A., *Korea's Fight for Freedom*. NY: Fleming H. Revell, 1920, 연세대학교출판부, 1969재간.
- Moffett, Samuel H., “The Independent Movement and the Missionaries,”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Vol.54, 1979.

■ 국문요약

---

### 3·1운동, 선교사 그리고 미일간의 교섭과 타결

안종철

이 논문은 3·1운동 당시 선교사들의 활동을 다룬 것이다. 선교사들은 비록 한국의 독립을 직접 주장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한국인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을 목도하고 해외언론,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국무부 등에 서신을 보내었다. 그리하여 3·1운동은 국제문제화 되었다. 일본의 강경파들은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의 3·1운동을 뒤에서 사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일본의 강경파들은 영미협조주의자들에 의해 일정하게 제어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3·1운동의 잔학상은 미 교회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와 재한선교사연합공의회로 하여금 일본과 일정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결국 동양관계위원회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식민지조선에 대한 일본의 일정한 개혁을 약속 받았고 재한선교사연합공의회도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에게 자신들의 개혁요구를 제출했다. 미국 당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범위를 넘어가는 재한 선교사들의 정치적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동을 걸었다. 3·1운동에 대한 선교사들과 미 기독교계의 일본당국과의 타협은 미 국무성의 태도와 큰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 Abstract

---

## March First Movement, American Missionary and the US-Japan Negotiations

An, Jong Chol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issionary activities during the March First Movement in 1919. While the Missionaries in Korea did not explicitly argue for Korean Independence, they watched the brutal oppression over Koreans by Japanese policemen and sent some letters and reports to English newspapers, Foreign Mission Board, and State Department. At this time, Japanese militia published some articles in newspapers saying that missionaries were behind the Korean Movement. It became an international event. The politicians who supported Japanese and the US cooperation, suppressed the Japanese hawkish faction. But with the influx of the News related to Japanese violence, 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of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was forced to contact the Japanese authorities as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did. 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got a promis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o introduce some reforms in Korea. Also,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presented their agenda to incoming governor-general,

Saito Makoto. But the State Department tried to rein on some missionaries agenda, like seemingly political activities. The compromise between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in America and Japanese authorities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Key Words : March First Movement, Missionary, Neutrality,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American- Japanese Conference